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고명균(여주 대신중학교)

이 연구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화가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무력통일의 호기(好期)를 잡으려는 강박감의 표출이자,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가장 극렬했던 1968년에 벌어진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는 시기별로 변화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1968년 중반에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었다. 그동안 군사모험주의 전략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군부강경파는 변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김일성은 군부강경파를 ‘군벌관료주의자’로 매도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버렸다. 군부강경파 숙청을 계기로 당·군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위원제가 실시되었다. 정치위원제는 군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정치위원제 도입으로 북한군의 ‘군사유일제’는 약화되었고, 김정일 후계 구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주제어: 군사모험주의, 대남도발, 군부강경파, 숙청, 정치위원제

1. 서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정치 환경은 상당히 역동적이었다. 외교, 군사, 경제 등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문에서 ‘위기’와 ‘갈등’의 도전적 상황이 수시로 주어졌다. 중·소 분쟁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고, 냉전의 주축이었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의 광풍에 사로잡힌 중국은 북한 지도부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은 북·소 외교관계가 부침(浮沈)을 겪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1년부터 진행된 7개년계획도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적 상황과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대내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취한 ‘군사모험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1968년에 집중되었던 군사도발은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북한군에 연대급까지 정치위원제가 실시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위원제는 군에 대한 당의 확고한 통제조치로서, 오늘날 북한 당·군관계의 특징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적 장치였다. 정치위원제 실시와 함께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당위원회가 활성화되었고, 총정치국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북한 공식 문헌에서는 정치위원제 실시 이유에 대하여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총국장 허봉학과 같은 ‘군별관료주의자’들의 군사만능주의를 제거하여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¹⁾ 군부강경파의 군벌주의적 행태, 군사만능주의적 도발의 책임을 물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국내 다수의 학자들이 북한 공식문헌에서 밝힌 정치위원제 실시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²⁾

북한의 주장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남군사도발의 책임을 군부강경파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발의 기획과 실행의 주체로 당과 수령이 아닌 군부강경파를 지목하고 있다. 둘째, 실패한 대남군사도발만 군부강경파가 주도한 일탈적 사건으로 다루어졌고, ‘대미항전’의 최고 상징으로 자랑하는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군부강경파의 공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문제들은 세밀한 문헌검토와 정황분석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군사모험주의 도발 주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당시 북한군 명령지휘체계 및 당·군 관계를 살펴볼 때, 1968년에 집중된 일련의 군사적 도발들을 군부 일각의 돌출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민족보위상이 군부대에 대남침투 작전을 명령할 수 있는 군령권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대남침투의 최고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드러난 바가 없다. 북한의 군사도발 당시 구체적인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군사도발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 밝혀볼 것이다.

-
- 1)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1.19),”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415~425쪽.
 - 2) 이대근,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 한울, 2006), 178쪽; 백학순, “당·정·군 관계,”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파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7), 57~58쪽;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계승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12), 23쪽.

둘째, 1968년에 북한이 벌인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연결하는 논리적 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일탈적인 대남도발이 아니라 푸에블로호 나포와 같이 군사모험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북한 지도부가 결정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가설이다. 사건 당시 발간된 문헌의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 배경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당과 수령이 주도한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발로(發露)였다는 점을 밝히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화가 당·군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군부강경파의 군사만능주의적 일탈 행위였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볼 것이다. 둘째, 시기별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변동 내용을 북한의 공식문헌과 외교문서, 2차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수정이 군부강경파의 숙청과 당·군 관계 변화를 불러온 과정을 그려볼 것이다. 셋째,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치위원회 실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치위원회 실시로 군 내 유일사상체계가 강화되고, 김정일 후계 구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정황을 드러내고자 한다.

2. 북한 군사모험주의 도발의 재구성

1) 군부강경파의 독자행동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66년 이후 남한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비무장지대에 서의 공격, 대통령 암살미수, 해상과 공중에서의 공격, 무장 게릴라 침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도발의 횡수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대결 당사자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고,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공포가 자욱해졌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아주 예리했고, 계획적이었으며, 조직적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군사 도발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사건은 북한 지도부에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했고, 역으로 남한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³⁾

1968년에 일어난 1·21 청와대 기습 사건과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향후 북한 군부의 세력재편 및 당·군 관계의 변화, 대남 전략의 수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기습에 대해 북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자생적인 ‘남조선의 무장유격대’의 투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였다.⁴⁾ 김일성은 1972년 평양을 방문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은 나의 의사, 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좌경

3)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남한은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고, 독자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남한에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파주: 한울, 2014), 24~25쪽.

4) 1968년 1월 23일부터 1월 말까지 『로동신문』 기사에 남조선 무장유격대의 투쟁 성과를 알려주는 기사가 실려 있다.

맹동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책임자들은 문책을 당했다”라고 말했다.⁵⁾ 사건 당시에는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했으나, 남북해빙 국면에서는 도발의 책임을 좌경맹동주의자들의 일탈 행위로 돌리는 선에서 시인한 것이다.

1972년 김일성의 언급은 1969년 1월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창봉, 허봉학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 탈북한 고위인사 황일호의 증언과 맞물리며 국내에서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⁶⁾ ‘경제·국방병진로선’에 따라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부의 세력이 막강해졌고, 이에 고무된 군부장경파가 당과 수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대남도발을 계획, 실행했다는 것이다. 대남도발 실패의 책임은 김창봉, 허봉학으로 대표되는 군부장경파들에게 전가되었고, 군부장경파의 숙청과 당·군 관계의 개선 조치들은 이들이 끼친 해악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1968년에 발생한 대남 군사도발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당시 민족보위상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해야 한다. <표 1>은 한국전쟁 직후 후방지원으로 축소되었던 민족보위성의 역할이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김일성 저작집』에 언급된 내용들을 추려낸 결과이다.⁷⁾

5) “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Lee Hu-Rak”(May 04, 1972), Inter-Korean Dialogue 1971~1972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NKIDP,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780>(검색일: 2015.5.16).

6)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69.1.6~1.14),” 『북괴군사 전략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327~341쪽; 황일호의 본명은 박병엽으로 신경완, 신평길, 최종민, 서용규 등 여러 가지 필명을 사용하였다. 박병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유영구·정창현 엮음(서울: 선인, 2010), 5쪽.

7) 한국전쟁 직후 민족보위성의 역할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고명균, “박헌영의

<표 1> 한국전쟁 이후 민족보위상의 역할 관련 『김일성저작집』의 언급 내용

언급 내용	역할 구분
“민족보위상은 전쟁경험을 연구하며 보급하는 사업을 원만히 조직지도할 것이며 전쟁경험자료들을 예비부대들의 훈련과 전투부대들의 전투행동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⁸⁾	- 부대 훈련 및 교육.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후방보위 강화, 동서해안의 1선방어 강화와 후방지역의 반항공대책 수립 대책 마련 지시. ⁹⁾	- 후방 보위.
진지방어 강화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일선 부대에 하달하며 명령 집행에 관한 책임을 민족보위상에게 위임함. ¹⁰⁾	- 방어명령 집행 책임 부여.
전투력 강화를 위한 명령을 하달하며 민족보위성에 군사교육국을 새로 설치할 것을 지시. ¹¹⁾	- 부대 훈련 및 교육.
각급 부대장들에게 후방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과 계획을 세워 민족보위상에게 보고하라고 지시. 민족보위상에게 군수물자사고방지대책과 경제절약에 관한 계획을 인민군 각급 부대들에 하달하라고 지시. ¹²⁾	- 후방 지원. - 행정 업무 지시.
평남관개공사 완공을 독려하며 민족보위성이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설비를 농업성에 돌려주라고 지시. ¹³⁾	- 후방 건설 사업.
“군사문제나 정치문제를 불문하고 모든 문제는 당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가령 당중앙위원회에 비교해 말한다면 민족보위상은 당중앙위원회의 군사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총정치국은 군대내 당조직들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¹⁴⁾	-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사업을 집행.
“물론 큰 부대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는 민족보위상이 명령할 수 없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나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명령은 민족보위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군사행동에 관한 명령은 민족보위상, 총참모장, 총정치국장이 련명수표하여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¹⁵⁾	- 군령권 행사 불가 확인. - 군정권 행사.

한국전쟁 초기 후방지원 임무로 축소되었던 민족보위상의 역할은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민족보위상은 부대 훈련 및 교육, 후방

북한군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배경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210쪽 참조.

지원 및 후방 보위, 행정 업무 지시 등 양병(養兵) 및 군사 행정과 관련된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였다. 당시 군정권의 핵심인 인사권을 누가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1969년 1월에 열렸던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 대한 김일성의 결론 연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은 김창봉과 허봉학의 과오를 비난하면서, 이들이 당의 간부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당에서 아끼던 간부들 수천 명을 임의로 자른 점, 간부들을 교양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난받았다.¹⁶⁾ 민족보위상의 간부 인사 및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당시까지 군에 대한 인사권을 민족보위상이 행사하였음을 유추해볼

-
- 8)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전투경험을 연구하며 보급하는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85호(1950년 8월 12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 49쪽.
 - 9) 김일성,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및도내무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1950년 8월 29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 75~85쪽.
 - 10) 김일성, “진지방어를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841호(1952년 12월 30일),” 『김일성저작집』, 제7권, 466~469쪽.
 - 11)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53년 8월 28일),” 『김일성저작집』, 제8권, 75쪽.
 - 12) 김일성, “군사물자의 취급과 보관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120호(195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8권, 284쪽.
 - 13) 김일성, “평남관개공사를 빨리 완공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소회의에서 한 결론(1954년 8월 28일),” 『김일성저작집』, 제9권, 94쪽.
 - 14)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4권, 351쪽.
 - 15)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결론(1969년 10월 27일),” 『김일성저작집』, 제24권, 284~285쪽.
 - 16)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69.1.6~1.14),” 327~328쪽.

수 있다. 군부강경과 숙청 이후 총정치국이 당조직지도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었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당조직지도부에 인사권이 집중되면서 군의 인사권은 총정치국장이 행사하게 되었다.¹⁷⁾ 민족보위성의 후신인 인민무력부는 인사권이 배제된 ‘제한적 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쟁기간 민족보위상은 군사작전지휘계통에서 배제되었지만, 전쟁 후반기 일선 부대에 대해 최고사령관의 방어명령 집행을 책임질 권한을 부여받았다. 민족보위상의 군령권(軍令權) 회복에 대한 언급이나 군령권 행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부강경과 숙청 이후, 김일성은 민족보위상이 ‘큰 부대’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큰 부대’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대남도발 당시에 민족보위성 정찰총국 소속 특수부대로 17정찰여단이 편성되었고, 124부대가 약 2,400여 명으로 구성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일성이 언급한 ‘큰 부대’는 사단급 이상의 부대를 지칭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¹⁸⁾

1968년에 벌어진 대남도발은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조선로동당 대남총국장 허봉학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1968년 대남 침투부대가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124부대였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대남공작 관련 직속부대의 작전지휘와 관련해서는 민족보위상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⁹⁾ 대남사업은 업무의

17) 중앙당 간부부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부를 통해 군 지휘관의 인사를 결정하였고, 정치간부에 대한 인사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과가 총정치국 조직부 간부과를 통해 결정하였다.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계승문제』, 28~29쪽.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 제1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57~58쪽.

특수성으로 인해 당의 직접적인 영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매우 폐쇄적인 분야였다.²⁰⁾ 당시 총정치국장 오진우는 1968년 말 ‘군별관료주의자’의 숙청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이듬해 초 총참모장으로 영전하였다. 대남도발에 적극 관여했을 경우, 총정치국장도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군부강경과 숙청 이후, 민족보위상은 정찰국 산하 부대에 대한 작전을 명령할 때에도 반드시 총참모장과 총정치국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보위성 직속부대에 대한 민족보위상의 자율적인 작전지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일성저작집』을 분석해본 결과, 민족보위상은 ‘최고사령관 명령’ 집행의 총책임자라는 지위와 군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군 지휘관 및 정치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²¹⁾ 그 뿐 아니라 당의 군사노선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정찰국 산하 여단급 이하 특수부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부강경과 숙청 이후, 민족보위상의 독자적인 작전명령 하달은 불가능했고, 총참모장과 총정치국장의 련명수표를 거쳐야 했다.

19) 1950년대부터 북한의 대남공작은 노동당 연락부, 내무성, 민족보위성 정찰국이 주로 담당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민족보위성과 내무성의 대남첩보를 토대로 정세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모니까, “4월민중항쟁시기 북한의 남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4·19와 남북관계』(서울: 민연, 2001), 230쪽; 김일성, “현 국내정세와 1957년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6년 12월 1일),” 『김일성저작집』, 제10권, 395쪽.

20)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전략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128쪽.

21) 김일성은 인민군대 내 당조직이 더 이상 사령관이나 민족보위상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당에 복종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보위성을 비롯한 일선 군부대에 당조직 생활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69.1.6~1.14),” 332~333쪽.

둘째, 군부강경파가 독자적으로 대남 침투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상당수는 조선로동당 대남공작부서에서 활동한 탈북인사 황일호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다.²²⁾ 황일호는 김창봉, 허봉학 등의 군부강경파가 대남사업에서 공을 세워 김영주 후계 구도를 변경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 후계 및 충성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당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남조선해방과 통일전략계획’을 수립해 1·21 청와대 기습사건 및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와 별개로 푸에블로호 나포, EC-121 격추는 김정일이 실무적으로 주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하지만 황일호의 증언이 당시 구체적인 정황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기습과 같이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도발을 군부가 김일성의 재가도 없이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967년 5월 4~8일 제4기 제1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을 비롯한 갑산파의 죄상이 폭로되었고,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갑산파 숙청 이후 김정일 주도하에 사회 전반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의 주도하에 ‘조선로동당역사연구실’이 ‘김일성동지

22) 신중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2), 255~258쪽;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5), 124~129쪽.

23) 황일호, “극비·북한의 ‘제2의 6·25’ 작전,” 『월간중앙』, 4월호(1993), 633~641쪽;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116~117쪽.

24)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80쪽.

혁명역사연구실'로 개편되었고, 『김일성동지혁명역사도록』을 새로 편찬해 연구실에 게시하는 등 유일사상체제 확립을 위한 김일성 혁명 전통 절대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²⁵⁾ 1967년 5. 25 교시에 대한 황장엽과 성혜량의 회고는 유일사상체제가 강화되던 당시 '반문화적 파괴'와 '비합리적 우상화'로 치닫는 북한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²⁶⁾

북한 사회 전반에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는 상황에서 군부가 당과 수령도 모르게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대남도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족보위상 김창봉은 1968년 2월 8일 조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확립할 것과 당의 군사노선인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받들어 전투정치훈련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²⁷⁾ 민족보위상이 군 지휘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남사업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지녔다 하더라도 당과 수령의 지시를 벗어나 일탈적 군사행동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외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 기습을 군부강경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²⁸⁾

청와대 기습 실패 직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

25)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350~351쪽.
 2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146~149쪽;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312~317쪽.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 『로동신문』, 1968년 2월 8일.
 28) 북한 지도부는 사건의 진상을 묻는 사회주의 우방국 외교관들에게 북한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둘러대기에 바빴다.

았다. 김창봉은 민족보위상으로 유임되었고, ‘군별관료주의자’ 김창봉, 허봉학, 최광에게 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²⁹⁾ 김일성은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 민족보위상 김창봉을 모스크바로 파견해 브레즈네프(Brezhnev Leonid Ilyich)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특사임무를 맡겼다.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을 염려하며 푸에블로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브레즈네프에게 김창봉은 전쟁지원에 대해 소련이 원칙적으로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³⁰⁾ 김창봉, 허봉학 등이 당과 수령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청와대 기습을 감행해 큰 물의를 일으킨 게 사실이라면, 민족보위상으로 유임되거나,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거나, 모스크바에 특사로 파견되었을 리 만무하다.

민족보위상이 인민군대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직속부대의 작전지휘와 관련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과 수령이 허용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창봉을 비롯한 군부강경파들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군대 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절대화하는 데 앞장섰다.³¹⁾ 1968년에 발생했던 1·21 청와대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김창봉,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오백룡동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8년 2월 4일; “민족보위상의 직책을 다시 맡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각국민족보위상들이 보내온 축전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8년 2월 6일.

30)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68, Urgent” (March 17,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NKIDP,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67>(검색일: 2015.5.18).

31) “조선인민군창건 17주년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대장 허봉학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65년 2월 8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기습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는 당이 제시한 대남전략전술에 따라 김일성의 승인하에 민족보위성과 조선로동당 대남총국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한 군사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사건의 연관성

청와대 기습이 실패하고 불과 이틀 후에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푸에블로호 나포 이유와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포의 의도와 계획성에 주목하는 측에서는 1·21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한 국제적 비난 회피, 한반도 긴장 조성으로 소련의 추가 원조 기대,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분산시킴으로써 전쟁 중인 북베트남을 간접 지원하려는 의도,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 배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푸에블로호의 영해 침범을 주장하는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 푸에블로호의 접근을 청와대 기습에 대한 남측의 해상보복이라고 북한 지도부가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주장은 나포의 우발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는 푸에블로호 나포의 이유를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다.

북한군이 사건발생 이전부터 푸에블로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혀 계산되지 않은 우발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³²⁾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푸에블로호의 나포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었던 김창봉을 비판하며 강력

필승불패이다.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 기념경축대회에서 한 김창봉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68년 2월 8일.

32)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비랑 끝 외교사』, 67~68쪽.

하게 대응한 당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언급하였다.³³⁾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려 했던 김창봉은 이내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1월 24일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해군구분대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2월 8일에는 민족보위상 명령을 통해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맞서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추 것을 지시하였다.³⁴⁾ 푸에블로호의 영해 근접은 북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의 주도하에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68년 1월 11일 일본 사세보(左世保)항에서 출항한 푸에블로호가 어느 시점에 북한군에 노출되었는지, 노출 당시 푸에블로호의 정체에 대해 북한군이 어느 정도 파악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푸에블로호의 나포가 북한에게는 미국과의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³⁵⁾ 의도적 도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과연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푸에블로호 나포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론과 주장들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헐거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회의자료 및 정확한 사건일지

33) 김일성의 비판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에는 김창봉의 신중한 입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4) “민족보위상 김창봉대장 미제침략군 무장간첩선을 나포한 해군구분대 군인들을 축하,” 『로동신문』, 1968년 1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 『로동신문』, 1968년 2월 8일.

35)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대규모 동원태세가 발령되었고 평양의 주민, 산업시설, 공장, 행정기관 등이 소개되었다. Sergey S. Radchenko,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Series #47, p.64.

가 공개되지 않는 한, 의도나 동기 차원에서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의 관련성을 추론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반면에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1·21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군사모험주의 노선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첫째, 1·21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활용하였다. 남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남파 게릴라 중 김신조가 생포되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기습 실패는 북한 지도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2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시작으로, 남한 내 자생적 무장유격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일 『로동신문』 1면을 채웠다. 사건 발발 직후부터 북한 지도부는 1·21 사건에 대한 시선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68년 1월 말~2월 동안 『로동신문』에 실린 두 사건 관련 기사의 빈도와 주요내용을 <표 2>에서 비교·정리하였다.

1월 23일부터 『로동신문』의 1면 주요내용을 장식했던 ‘남조선 무장유격대’ 관련 기사는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 무장간첩선’ 관련 기사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대체되었다. 25일 이후 각 지면의 주요내용을 푸에블로호 관련 기사가 차지하였고, 기사의 빈도와 지면비율에서도 무장유격대 관련 기사를 압도해나갔다. 26, 27일 무장유격대 관련 기사가 1면 주요내용을 장식한 이유는 남한의 무장유격대 활동이 서울 및 경기 도처에서 재개되고 있으며, 남한 내 전 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무장 유격대 투쟁의 ‘지속성’과 ‘동시다발성’을 선전함으로써, 1·21 청와대 기습사건이 남한 내 자생적 무장유격대에 의한 투쟁이

<표 2> 1·21 청와대 기습 및 푸에블로호 관련 『로동신문』 주요 기사 정리

보도 일자	1·21 청와대 기습 관련 기사	푸에블로호 관련 기사
1월 23일	“무장소부대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출현하여 괴뢰경찰부대와 총격전”(1면 주요내용).	
1월 24일	- 서울 및 경기도 곳곳에서 무장유격대의 출현과 공격을 알리는 다수 기사가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1면 대부분을 장식.	푸에블로호 나포 사실 최초 1면 보도.
1월 25일	- 서울 인왕산, 파주, 고양, 의정부, 동두천, 김포 등 도처에 진출하여 투쟁 중인 무장유격대 관련 다수 기사가 1면에 보도.	- 푸에블로호 관련 소식이 1면, 4면 주요내용으로 보도.
1월 26일	- 무장유격대의 서울 시내 재진출 및 충북 음성 출현 소식을 1면 주요내용으로 다룸.	- 푸에블로호 함장의 간첩행위 관련 고백서 2면 게재.
1월 27일	- 경기도 일대, 충북 음성의 무장유격대 출현 소식을 1면 주요내용으로 다룸.	- 푸에블로호 침입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항의한 내용(2면), 함장과의 기자회견 내용(3면) 게재.
1월 28일	-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2면 하단에 보도.	- 푸에블로호 관련 정부성명, 사설, 해외 언론보도 기사가 1~2면 주요내용 장식. - 푸에블로호 선원의 자백서 3면 게재.
1월 29~31일	-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1면 하단에 보도(29일, 31일).	-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기사 및 각국 지지 성명 등을 1, 2면 주요내용으로 다룸.
2월	- 경기도 양주에 무장유격대 출현 소식 3면 보도(9일).	- 전 세계의 지지 성명 및 연대집회 내용 보도(1~4일). -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자백서 게재(5, 6, 9, 13일). - 푸에블로호의 불법 영해 침입 물적 증거 보도(14~15일). -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공동사죄문’ 게재(17일).

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2월 들어 무장유격대 관련 기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반면에 1월말부터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자백서가 신

문에 연재되었고, ‘영해침범’ 및 ‘불법정찰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한 책임을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각 국 외교관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1월 24일 북한 외무부상 김재봉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사 및 대리대사들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김재봉은 미국 무장간첩선의 영해침범 및 불법정찰활동이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이자 침략 행위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정당한 행위를 만장일치로 지지해주고 미국에 대해 항의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사건의 연관성을 묻는 불가리아 대리대사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은 남한 정부가 무장유격대를 대대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침략 전쟁을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답하였다.³⁶⁾ 청와대 기습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비난의 화살을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답변이었다. 26일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 박성철은 동독 대리대사와의 면담에서 “1·21 청와대 기습은 남한 내 애국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둘의 대화는 푸에블로호 사건에 집중되었다.³⁷⁾

둘째,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청와대 기습 실패 이후 위축될 수 있었던 군사모험주의를 현상 유지시켰고, 북한의 대외협상력을 강화

36) “Memorandum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DPRK for the Ambassadors and Acting Ambassadors of all socialist Countries accredited to the DPRK”(January 24,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41>(검색일: 2015.5.21).

37)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20, Flash”(January 26,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46>(검색일: 2015.5.22).

시켰다. 두 사건은 ‘자주로선’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상호 연계를 맺고 있었다. ‘자주로선’은 모든 것을 자국의 이익에 복속시킨다는 원칙을 국가 단위에서 구현하는 외교노선임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한다는 자주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³⁸⁾ 1960년대 북한은 대내적으로 ‘국방건설’에 주력해 ‘자주로선’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다.³⁹⁾ 1967~1971년간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비용을 ‘민족보위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⁴⁰⁾ 1962~1966년간 군비총액과 예산비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1970년 11월 19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1부수상 김일의 보고를 토대로 1960년대 누락되거나 생략된 민족보위비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60년에 국방부문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9%가 돌려졌다면 당대표 사회의가 있는 이후인 1967~69년동안에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31.3%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돌려졌으며 지난 9년동안에 거의 89억

38) 김보미,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 동맹의 특수사례”(북한대 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쪽.

39) 1962년 12월 10~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민 경제 발전에 일부 제약이 따르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이 당의 노선으로 확정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경제부문의 역량을 동원하는 국방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159쪽;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자,” 『근로자』, 제7호(1967), 2~3쪽.

40) 1967년 국가예산의 수입지출 규모는 39억 6444만 원으로 이중 30.2%에 달하는 11억 9000여만 원을 국방비로 배당하였다.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민적예산,” 『로동신문』, 1967년 4월 27일.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방건설에 지출되었습니다.⁴¹⁾

함택영은 1960년 공식 발표된 전체 국가예산 대비 민족보위비 비율 3.1%와 김일의 보고에 등장한 19% 사이의 차이에 대해 장비 시설 유지비(부품 및 연료구입, 수리 등) 및 전력증강투자비(무기 및 장비구입, 시설, 연구개발 등) 등의 지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⁴²⁾ 김일이 밝힌 9년간의 국방비 총액과 연도별 국가예산 자료를 토대로 1960~1966년 동안 연평균 약 19%의 예산이 민족보위비에 할애된 것으로 추정하였다.⁴³⁾

군비지출의 증가는 ‘4대 군사로선’을 실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5년 2월 코시킨(Kosygin Aleksey Nikolaevich) 소련 수상의 평양방문 이후 소련과의 군사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이 재개되면서 ‘전군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⁴⁴⁾ 민족보위상 김창봉은 1967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강된 군비투자를 바탕으로 전군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⁴⁵⁾ 군사력 증강은 김일성과 북한군 지도부에 자신감을 심어주

41) 『로동신문』, 1970년 11월 20일.

42)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3), 139쪽.

43)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서울: 법문사, 1998), 220~221쪽.

44) 1966년 이후 소련에서 많은 무기가 도입되었고, 군사기술 이전을 위한 양국 실무자 회의가 매년 개최되었다. 1967년 이후 총예산의 30%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한 이유도 소련의 무기 수입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과주: 한울, 2006), 135쪽.

45) 김창봉은 4대 군사로선 중에서도 특히 ‘전군현대화’를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 인민군대가 ‘현대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최신식무기로 장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민족보위상 명령에서도 인민군대가 당이 제기한 ‘전군현대화’와 ‘전군간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었다. 군사적 자신감의 확대와 더불어 이 시기를 놓치면 한반도 통일 은 요원할지 모른다는 강박감은 북한의 군사적 모험 심리를 자극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일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게 ‘남조선 혁명’을 지원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호기(好期)로 인식되었다.⁴⁶⁾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현실 인식은 ‘자기중심적’이었고, 군사전략적 대응은 ‘자기주도적’이었다. 1960년대 후반 군사모험주의가 북한의 독자적 군사·대외전략의 일환으로 가시화되었다. 1966년부터 비무장지대의 한국군과 미군을 상대로 수차례 도발을 감행하였고, 1968년에는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 등 극단적 형태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군사도발에 치중한 대남전략은 상당기간 휴지기(休止期)가 불가피했다. 남한과 미국, 사

치하였다. 이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방어 중심의 군사노선인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넘어서 혁명의 보위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도 펼칠 수 있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노선의 강화를 추구했음을 의미한다. 『로동신문』, 1968년 2월 8일.

- 46) 북한이 대남도발과 푸에블로호 사건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베트남전을 간접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시 북베트남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해 북한이 세계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남한 상황을 전쟁 중인 남베트남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에도 불만을 토로하였다.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44, Regular”(February 16,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57>(검색일: 2015.5.26);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관의 외교문서를 분석한 벨라주 잘론타이(Balazs Szalontai)는 남한의 정치상황과 한-미 관계의 변화가 1968년 초 북한의 군사도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① 남한에서의 거점 구축, ② 박정희 정권의 고립, ③ 주한미군 철수가 군사도발의 주요 목표였다고 주장하였다. Balazs Szalontai,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4:4(Fall 2012), pp.124~125.

회주의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피며 다음 작전을 구사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거치며 휴지기 없이 지속되었다.⁴⁷⁾ 푸에블로호 사건은 몸을 사리며 사태를 관망해야 하는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역공을 펼치는 ‘피해자’로 둔갑하기에 좋은 계기였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청와대 기습 이후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군사모험주의를 현상 유지시켰고, 북한의 대미·대소·대중협상력을 강화시켰다. 미국은 인질 송환을 놓고 북한과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북한의 도발에 ‘연루’의 우려를 가졌던 소련에 대해 김일성은 각종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⁴⁸⁾ 중국은 푸에블로호 나포에 호응하며 북한의 ‘반미항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냈다.⁴⁹⁾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문화대혁명 이후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

47) 1월 25일에는 북한군이 비무장 지대의 미군 초소를 습격하여 미군과 한국군 10여 명을 살상하였다. 『로동신문』, 1968년 1월 26일.

48) 김일성은 북한에 부족한 코크스(cokes), 석탄, 석유 가공품을 지원해준 소련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북천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앞당겨줄 것, 알루미늄 공장 건설, 부족한 동선(銅線) 지원, 당과 정부요인들의 상호 방문을 위해 평양과 모스크바 간 특별기 취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Comrade Zvetkov, and Comrade Jarck”(July 29,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98>(검색일: 2015.5.30).

49) 당시 동독과 루마니아 대사관에서는 북한의 도발 이후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저우언라이(周恩來)가 김일성에게 무력충돌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On Current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PRC”(March 03, 1968), China-North Korea Relations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55>(검색일: 2015.5.30);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68, Urgent”(March 17,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67>(검색일: 2015.6.1).

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푸에블로호 사건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그동안 무력도발로 점철되었던 군사모험주의 전략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직접 노출의 피해가 적으면서도 영향력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3.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수정과 당·군 관계 변화

1) 군부강경파의 숙청 배경

군부강경파의 숙청 이유를 밝히는 것은 당·군 관계 변화 배경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다. 정치위원제 실시로 당·군 관계가 군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군부강경파가 저지른 과오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밝힌 김창봉, 허봉학 등 군벌관료주의자의 숙청 이유는 다양하다. 당의 군사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관철하지 않은 점, 당에 사업보고를 거부하고 당조직 및 정치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 당간부들을 자의적으로 인사조치함으로써 간부사업에 해독을 끼친 점, 당적 영도를 거부하고 “군사만능주의”와 “명령주의”, “관료주의”를 퍼뜨린 점 등을 이들의 중대한 과오로 지적하고 있다.⁵⁰⁾

50)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부장,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1969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제23권, 471~478쪽;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숙청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⁵¹⁾ 군부강경파의 정치적, 도덕적, 군사적 오류와 실책에 대한 비판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무엇이 숙청의 주요한 이유인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숙청 과정을 들여다보면,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먼지털이식’ 정지(整地)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숙청의 이유를 추론함에 있어 북한이 공식발표한 내용에만 근거할 수 없는 이유다. 김일성에 대한 군부강경파의 충성심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복기해볼 때, 숙청의 이면에는 김창봉, 허봉학 등 군부강경파에 대한 김일성의 ‘신뢰상실’이 자리한다. 1968년 초까지도 굳건했던 군부강경파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된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김일성이 신뢰를 거두게 된 이유는 군부강경파들이 수정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있다. 청와대 기습이 단행된 1968년 1월과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가 남파된 10월 사이에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었다. 군사모험주의 전략 수정의 단서는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에서 당시 조선로동당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415~418쪽.

51) 1969년 1월에 김일성은 최신 무기 도입에만 집착한 군부강경파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듬해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보총이나 몇 자루 생산하는 보잘것없는 군수공업이 있었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전군현대화 사업의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군부강경파들이 전군현대화만큼은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은연중에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부강경파에 대해 당의 군사노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김일성의 비판들이 ‘숙청의 이유’라기보다 ‘숙청’을 위한 이유로 동원되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제25권, 256~257쪽.

<표 3> 1960년대 후반 대남 군사모험주의 전략 단계별 『근로자』의 주요내용

구분	대남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주요 내용(정세인식 및 주요 투쟁지침)
1) 준비단계 (1966년 10월 ~ 1967년 중반)	- 현정세는 대중적 혁명운동을 발전시켜 남조선 혁명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힘. 좌·우경적 편향을 경계하고 적·아간의 역량을 정확히 판단해 모험주의적 투쟁으로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투쟁지침으로 제시함. ⁵²⁾ -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적당’을 조직하고 통일전선을 강화시켜 대중조직 사업과 선전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시함. ⁵³⁾
2) 고조 및 실행단계 (1967년 중반 ~ 1968년 초반)	- 경제·국방건설 병진로선을 통해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군사적 준비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력 강화에 따른 자신감을 표출함. ⁵⁴⁾ - 남조선 혁명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주의’ 역량이 단합하여 ‘우리 세대’에 자주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⁵⁵⁾ -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북반부 인민들의 준비여하에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무장유격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세대에 조국통일을 달성하자고 독려함. ⁵⁶⁾ - 남조선에는 현재 무장유격대의 투쟁으로 ‘파국적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쟁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함. ⁵⁷⁾
3) 수정단계 (1968년 중반 ~ 1968년 말)	- 현 단계에서 남조선 혁명의 기본방침은 혁명역량을 보존, 장성시키고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주체적 혁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혁명역량의 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⁵⁸⁾ - 남조선 내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를 받는 ‘혁명의 주력군’을 꾸려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조성된 정세에 맞게 대중운동과 투쟁을 전개해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함. ⁵⁹⁾ - 북반부와 달리 아직 식민지반봉건 사회인 남조선의 혁명을 위해서는 남조선 인민들 자신의 결정적 투쟁에 달려 있으며, 이를 북반부 인민들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은 전략·전술적 차원과 혁명역량의 편성에 있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동일시하거나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현 시기는 혁명정세가 성숙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⁶⁰⁾

대남정책방향과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해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이 군사모험주의적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했던 1966년 10월부터 1968년 말까지 『근로자』에 실린 대남 정세인식 및 투쟁

지침과 관련된 주요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군사모험주의 전략 단계별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준비, 고조 및 실행, 수정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성립으로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느낀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화하기 위해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듬해부터 북한의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30%를 넘어섰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는 소규모, 국지적 대남 군사도발을 빈번하게 일으켰다. 이 시기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였다. 모험주의적 투쟁에만 치우치지 말고, ‘혁명적당’ 건설 및 ‘반미구국통일전선’ 구축을 통해 남조선 혁명역량을

-
- 52) 김정숙, “남조선의 현정세와 남조선혁명에 대한 당의 기본방침,” 『근로자』, 제12호(1967), 22~27쪽; 리일, “남조선혁명의 선차적인 요구는 혁명역량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자』, 제9호(1967), 44~50쪽.
 - 53) 권혁,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 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 『근로자』, 제1호(1967), 8~13쪽; 조명일,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제4호(1967), 29~32쪽; 전기홍, “남조선혁명과 반미구국통일전선,” 『근로자』, 제5호(1967), 22쪽.
 - 54)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조를 일으키자,” 『근로자』, 제7호(1967), 3~4쪽.
 - 55) 김기홍, “조선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근로자』, 제10호(1967), 50쪽.
 - 56)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세대에 기어코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근로자』, 제1호(1968), 22~23쪽.
 - 57) “미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 『근로자』, 제3호(1968), 30~33쪽.
 - 58) 백길만,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시기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강령적 지침,” 『근로자』, 제5호(1968), 51~56쪽.
 - 59) 리명현,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축적하고 장성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쟁지침으로 제시하였다.

1967년 5월 갑산과 숙청 이후 군사모험주의는 점차 고조되었다. 1967년 후반 들어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충돌은 1953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다.⁶¹⁾ 군부강경파들이 군 내 주요 보직은 물론 조선로동당 대남사업 책임까지 맡게 되었다.⁶²⁾ 전 사회에 걸쳐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 강조되었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경쟁이 가속화되었다. 1968년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1·21 청와대 기습은 그동안 축적된 군사적 자신감의 표출이자 대내외적 상황을 자기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최고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푸에블로호 나포는 미 정보함의 영해 근접 상황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했지만 인질을 활용한 선전 및 대내외적 국면전환, 전시동원체제 구축, 나포 선박의 활용 등에 있어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수반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군사모험주의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표면상으로는 여느 때보다 충만한 군사적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북한지도부는 ‘자신감’과 ‘두려움’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요구,” 『근로자』, 제8호(1968), 58~64쪽.

60)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전략전술적 방침,” 『근로자』, 제10호(1968), 48~59쪽.

61)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WIH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Series #44, p.20.

62) 총정치국장 허봉학은 숙청된 갑산과 인사 리효순을 대신해 조선로동당 대남총국장으로 보직 이동하였고, 후임 총정치국장에는 오진우가 임명되었다. 민족보위상은 김창봉으로 변함이 없었다. 민족보위성과 조선로동당 대남총국의 주도 하에 정찰총국 산하 283군부대, 124부대 등 특수부대가 창설되었다.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137쪽.

적절히 활용하였다.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남조선 해방’을 지원하여 조국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군의 보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요 투쟁지침으로 제시함으로써, 제국주의와 각을 세우는 사회주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 전국에 대규모 동원태세가 발령되었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긴 대다수의 주민들은 북한지도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대외적으로도 푸에블로호 나포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전쟁 위기를 극대화함으로써 소련의 경제, 군사적 원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⁶³⁾

1968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 전략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⁶⁴⁾ ‘남조선 해방’을 위해 북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남한 내부의 주체적 투쟁 역량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준비단계’에서 밝힌 정세인식 및 투쟁지침과 흡사한 언급들도 자주 등장했다. 1968년 『근로자』 제10호에 실린 논문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에서는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무력투쟁에 정치투쟁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68년 중반 들어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수정된 데에는 다음 세 가

63) Sergey S. Radchenko,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pp.20~21.

64) 당시 평양주재 체코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1968년 5월 들어 북한 내부의 군사적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정황이 기술되어 있다.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DPRK”(June 4,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98>(검색일: 2015.5.30).

지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푸에블로호 나포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푸에블로호 나포는 미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치밀한 대응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탈바꿈시켰다. 1·21 청와대 기습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무마시킬 수 있었고, 총동원태세를 발령해 ‘7개년계획’의 차질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협상력을 증진시켰고, 한·미관계의 균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왔다.⁶⁵⁾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여 양성한 특수부대원 30여 명 대부분을 희생시킨 1·21 청와대 기습 사건과 비교할 때,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포심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적은 손실로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효율적 군사 전술이었던 것이다. 무장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요인을 암살하거나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극단적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재고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군사도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이다. 1·21 청와대 기습에 대응해 남한은 1월 22일 대간첩본부를 창설하였고,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5월 10일에는 주민등록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교육현장에서 반공교육이 강화되는 등 전 사회에 걸쳐 ‘병영국가적 동원’과 ‘반공주의의 확산’이 이루어졌다.⁶⁶⁾ 2월 8일에 존슨(Lyndon B. Johnson) 미 대통령이 1억 달러의 추가군사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국군 장비 현대화 및 대간첩장비 도입을 약속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확대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향토예비군

65)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인한 한·미관계 균열에 대한 내용은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73~76쪽 참조.

66) 신중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 262~264쪽.

창설과 준비증강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⁶⁷⁾ 북한의 입장에서 1·21 청와대 기습은 결과적으로 “굵어 부스럼 만든 격”이었다. 극단적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셋째, ‘통일혁명당’의 관련 인사 대부분이 검거되면서 조직이 붕괴되었다. 통혁당은 북한이 남한 내 혁명역량을 조직, 강화할 목적으로 지원하여 결성된 ‘혁명의 전위당’이자 조선로동당의 ‘남조선 지구당’이라고 볼 수 있다.⁶⁸⁾ 1968년 중반, 북한이 수년간 공을 들였던 통혁당 조직이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 7월 4일에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태가, 24일에는 통혁당 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 이문규가 검거되었다. 7월 20일에 발표된 ‘임자도 지하당사건’으로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 등 관련자 118명이 검거되었고, 8월 24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58명이 검거되었다. 통혁당 조직의 붕괴는 남한 내 ‘혁명의 교두보’가 사라지는 것으로, 김일성의 입장에서 녀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남한 내 혁명역량을 보존, 축적, 장성시키는 것이 이 시기 대남전략의 가장 중요한 방침이 되었다.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수정으로 대남공작의 목표도 달라졌다. 1·21 청와대 기습과 같은 파괴적 공격에서 벗어나 지역인민위원회 창설과 정치선전사업, 무장투쟁의 거점 확보 등 남한 내 혁명역량을 유지·강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상 및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이상일군앞에서 한 연설(1968년 4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22권, 196쪽,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소년들까지 괴뢰 <향토예비군>에 강제로 끌어넣으려고 책동,” 『로동신문』, 1968년 3월 12일; “남조선각계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향토예비군> 조작놀음을 배격,” 『로동신문』, 1968년 5월 12일.

68) 대동편집부, 『통혁당-역사·성격·투쟁·문헌』(서울: 대동, 1989), 33쪽.

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⁶⁹⁾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배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가운데 김창봉, 허봉학 등 군부강경파는 변경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1968년 8월 20일 제주 서귀포에 무장간첩선을 보내 통혁당 간부들을 구출하려고 했으나, 침투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군·경에 의해 12명이 사살되고 2명이 생포되는 피해를 입었다.⁷⁰⁾ 10월 말에는 180여 명에 달하는 무장공비를 울진·삼척 지구에 침투시켜 붕괴된 통혁당 조직을 재건하고, 남한 내 혁명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확보하려 했으나 철저히 실패하였다.⁷¹⁾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군부강경파가 대남정치사업 및 통혁당 재건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게다가 북한지도부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우호적일 거라고 착각하였다.⁷²⁾ 반공이데올로기 선전과 교육으로 공산주의와 북한의 도발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남한 주민들에게 남파 공작원들은 상투적으로 접근하였고,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⁷³⁾ 목표로 삼았던 임무

69) “남조선의 한 혁명적무장유격대가 경북 울진군의 한계 부락을 1주야동안 완전히 장악: 정치선전사업을 전개, 약질주구를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 괴뢰군경들을 소멸,” 『로동신문』, 1968년 11월 6일. “울진지구내 청장년들 무장유격대입대를 집단적으로 탄원, 봉화군에서 무장유격대와 주민들이 군인민위원회 창설,” 『로동신문』, 1968년 12월 2일;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들이 도처에서 계속 맹렬한 활동을 전개 삼척에서 괴뢰군경초소들을 또 기습, 울진에서는 군중들속에 들어가 정치선전공작을 전개,” 『로동신문』, 1968년 12월 19일.

70) “통혁당 간부 구출 시도한 북한첩선 검거는 한국 중정의 역공작이었다,” 『월간조선』, 10월호(2010).

71) 당시 침투한 인원은 약 180명 정도로 이 중 110여 명이 사살되고, 70여 명 정도가 무사 귀환했다고 한다. 황일호,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의 진상,” 『월간중앙』, 7월호(1993).

72) 김경현,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열렬한 흠모,” 『근로자』, 제4호(1968).

73) 남파 공작원들은 산간 지역의 주민들을 회유 또는 강압하여 통일혁명당 입당원

가운데 어느 하나도 완수하지 못한 체 군·경의 추격에 쫓기게 되었다. 무장공비들은 북한으로 철수하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⁷⁴⁾ 이들의 만행은 남한 내 반공정서를 더욱 강화시켰고,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사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와 달리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의 확대, 복사판이 되어버렸다. 울진·삼척지구 침투공작 실패는 ‘유일적 지도자’로 거듭나려는 ‘수령’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중대한 사건이자, 김일성이 군부강경파에 대해 신뢰를 거두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2) 정치위원회 실시의 의미

1969년 1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창봉, 허봉학, 최광, 김철만, 유창권, 김양춘, 김정태, 정병갑 등 군부강경파의 당지도 거부 및 군벌관료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 군부강경파의 숙청과 함께 당·군 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총정치국을 포함한 군 내 정치기관과 당조직이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월권적 행태에 놀려 정치지도 및 당정치사업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급까지 정

서를 쓰도록 했다.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138쪽.

74) 북한 내부에서도 남파공작원들의 만행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군벌관료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이 진행되었던 1969년 1월에 발간된 『근로자』에 항일유격대의 군중 친화적인 투쟁경험을 칭송하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울진·삼척지구에 남파된 공작원들이 저지른 주민살해 등 과오에 대해 간접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군중규율,” 『근로자』, 제1호(1969), 25~31쪽.

치위원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위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총정치국 일군들과의 담화에 잘 드러나 있다.

정치위원은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입니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의 당 및 정치책임자로서 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위원은 군사지휘관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는 결론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저지시킬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위원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⁷⁵⁾

기존의 ‘정치부장’, ‘정치부대장’이 ‘당일군’, ‘정치일군’으로서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보고체계를 가지고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실무적으로 집행해왔다면, ‘정치위원’은 당에서 직접 파견한 당의 대표로서 당의 지도 및 통제 권한을 직접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총정치국과 예하 정치기관을 통해 군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도 일시적, 부분적으로는 가능했지만, 군부강경파가 득세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무력화될 수 있었다. 당시 총정치국은 군을 통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⁷⁶⁾ 정치위원제의 실시는 한동안 무

75)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1.19),” 420~421쪽.

76) 당시 인민군 내 각급 정치부가 당정치사업에 대한 통보를 총정치국 계선이 아닌 참모부 계선을 통해 진행하도록 강요받았을 정도로 총정치국의 권한은 오늘날과 같이 강력하지 못했다.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력화된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정치위원제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군사유일제’의 약화와 ‘당적 통제’의 제도화

1960년대 후반 민족보위상 김창봉을 필두로 한 군부강경파들은 이전과 비교해, 군사·국방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군부의 자율성 확대는 당과 수령이 기획하고 적극 독려한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성공적 수행 여부와 맞물려 있었다. 하지만 ‘남조선 혁명’의 전위당 임무를 수행해오던 통혁당 조직이 붕괴되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가 실패하면서 군부강경파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당과 수령의 묵인하에 휘둘러오던 ‘군사제일주의’라는 칼날이 이제는 ‘군별관료주의’라는 부메랑이 되어 군부강경파를 직접 겨냥했다. 김일성은 암묵적으로 허용해오던 군사유일제를 약화시킴으로써 확장된 군의 자율성을 제어하고자 했다. 정치위원제를 도입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및 군사유일제 약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

북한군 작전지휘체계에서 군 지휘관의 유일적 권한을 보장해주는 군사유일제는 창군 이래 변함없는 원칙이었다. 군부강경파 숙청 이후에도 군사작전 임무수행과 관련해, 당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지휘관의 우선결정권을 보장하였다.⁷⁷⁾ 그러나 표면상의 원칙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1.19),” 416~417쪽.

77)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는 대대장이 명령하여야 하며 그 명령이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당의 노선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는 정치부대대장도 그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표 4> 북한 ‘군사유일제’의 변천과정

시기구분	군사유일제의 변화
조선인민군 창군~ 총정치국 설립 이전 (1948.2~1950.9)	- 창군 당시 군 수뇌부를 만주파가 장악. - 만주파 김일이 문화훈련국장장으로 재임하며 군사유일제 강조.
초대 총정치국장 박헌영 재임기간 (1950.10~1951.5)	- 총퇴각 당시 무너진 군의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군 지휘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감시 강화, 군사유일제 약화.
총정치국장 김재욱 재임~ 총정치국장 최종학 숙청(1951.5~1958.1)	- 총정치국장이 각급 정치부에 군사유일제 강화 방침 천명. ⁷⁹⁾ - 1952년 7월 군사유일제 위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사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결정. ⁸⁰⁾ -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유일제 강조. ⁸¹⁾
당위원회 설치~ 국방력 강화 방침 천명 이전 (1958.3~1962.12)	- 총정치국의 업무 태만과 허위 보고 지적하고, 당적 통제에서 벗어난 군관들의 과오를 비판. ⁸²⁾ - 군사유일제의 주제적 적용을 강조. ⁸³⁾ - 지휘관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유일제 대신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지도를 도입. ⁸⁴⁾
국방건설 집중~ 군사모험주의 전략 수행 (1963년 초~1968년 말)	-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천명. - 군비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실행되는 가운데 군부의 자율성 확대, 군사유일제 강화.
군부강경파 숙청 이후 (1968년 말 이후)	- 정치위원제를 실시하여 군에 당의 전권 대표를 파견. - 총정치국 및 군 내 정치기관의 위상 강화. -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 모든 무력의 지도권 이관)

과는 별개로 당·군 관계에서 군사유일제는 확대와 축소를 거듭해왔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면 군사유일제는 자연스레 움츠러들었고, 군사유일제 강조로 군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군부가 당적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군사유일제와

결론(1969년 10월 27일),” 265쪽.

당적 통제가 원칙적으로는 ‘상호공존’해야 했지만, 실제는 ‘길항관계’에 놓여있었다. 군에 대한 당적통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게다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권력장악 및 권력유지를 위한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정치위원회 실시로 당적 통제가 제도화, 구조화되기까지 양자 간의 대립은 불가피했다.⁷⁸⁾ <표 4>에 조선인민군 창군부터 정치위원회제가 도입되는 기간 동안 북한의 당·군 관계에서 ‘군사유일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정리하였다.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군사유일제는 시기별로 당·군 관계의 변화를 기능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1958년 최중학 등 군 내 ‘반당종파분자’들에 대한 숙청 이후, 연대급 이상에 당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군에 대한 당적 영도와 통제는 강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당의 우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62년 12월 10~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국방

78)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권력장악 및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내용은 고명균, “박헌영의 북한군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배경연구,” 226~237쪽 참조.

79)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내 로동당단체들의 제과업: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에게주는 참고자료』, 8~9쪽, RG242 SA2012, Item#114.

80)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7권, 308~315쪽.

81) 김일성,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련합부대이상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56년 12월 20일),” 『김일성저작집』, 제10권, 451쪽.

82)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한 연설(1958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2권, 97~99쪽.

83)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지휘관의 당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당·군 협력·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군사유일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조

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결의된 후, 본격적인 군비증강에 돌입하였다.⁸⁵⁾ 당의 군사로선인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 요새화’의 방침이 제시되었고, 국방건설 및 자위노선의 이행과정에서 군부강경과가 군 내 요직을 차지하였다.⁸⁶⁾ 군부의 자율성은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고, 군사모험주의 전략을 수행하면서 극대화되었다. 김일성의 묵인하에 군사유일제가 강화되면서 군 내 정치기관 및 당조직의 보고체계가 무력화되었고, 당정치사업은 약화되었다.

수정된 군사모험주의 전략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군부강경파들이 숙청되면서 그동안 군부가 누렸던 자율성은 축소되었다. 대남 군사도발 과정에서 강화되었던 군사유일제의 변화도 불가피했다. 정치위원제가 실시되면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당의 대표인 정치위원회에게 군사지휘관의 명령이 당의 노선에 어긋날 경우 명령 수행을 거부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군사작

선인민군 군단이상 군사,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1959년 5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13권, 298~299쪽.

- 84) 김일성, “인민군대내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4권, 351~352쪽.
- 85)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방건설을 강조한 데에는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상황에서 소련이 인도를 지지하고, 쿠바사태를 평화적으로 봉합하자, 이에 실망한 북한이 소련의 평화 공존 정책을 간접 비난하였다. 이에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중단하였다. 북한과 밀착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소련의 경제·기술 지원 중단으로 북한을 지원할 형편이 아니었다.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통해 북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86) 김일성,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발췌): 김일성군사대학 제7기졸업식에서 한 연설(1963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17권, 444~447쪽.

전 시 지휘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군사유일제의 기본 원칙만을 유지한 채,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체적 지도 방식이 도입되었다. 부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군 지휘관과 정치기관, 당조직의 상호협력과 상호견제가 강조됨에 따라 ‘지휘관 중심’의 군사유일제는 약화되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모든 무력을 지휘하도록 당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군지휘관의 독자적인 지휘권 행사는 금지되었다.⁸⁷⁾

(2) 군대 내 김정일 후계 구도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치위원제 실시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군대 내 김정일 후계 구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갑산과 숙청 이후 당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문학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유일사상체계 구축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김정일이었다.⁸⁸⁾ 계모 김성애의 후원을 등에 업은 이복형제 김평일, 삼촌 김영주와 후계경쟁을 벌여야 했던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얻는 방법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1967년부터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에서 과장, 부부장을 역임하면서 김일성 개인숭배 및 우상화사업을 주도하였다.⁸⁹⁾

문화·예술분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군대 내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 당 선전선동부, 군사부 구성원들에게 수령이 제시한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과 4대 군사노선의 탁월함을 칭송하며, 항일유격대 시절 수령이 제시한 탁월한

87) 현성일, 『북한의 군사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전략을 중심으로』, 126쪽.

88)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160~170쪽 참조.

89)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전략을 중심으로』, 123쪽.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⁰⁾ 109군부대 정치부중대장과의 담화에서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며,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해설함으로써 중대군인들을 수령의 혁명전사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¹⁾

김정일은 군대 내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월권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칫 군통수권자인 김일성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⁹²⁾ 후계경쟁 구도 속에서 김정일의 지위는 견고하지 못했다.⁹³⁾ 김일성의 신임을 받기 위해 낮은 자세로 몸을 사리던 김정일이 1969년 1월 당조직지도부, 총정치국 일군들을 불러놓고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문헌접수 및 토의사업 조직을 지시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동안 다방면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구축에 기여한 대가이자, 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김정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적극적 개입은 훗날 선군정치 기원을 1960년대 말로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⁹⁴⁾

90) 김정일,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조 선로당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8년 2월 2일),” 『김정일 선집』, 제1권, 328~333쪽.

91) 김정일, “정치부중대장의 임무: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정치부중대장과 한 담화(1968년 3월 13일),” 『김일성 선집』, 제1권, 334~335쪽.

9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전략을 중심으로』, 126쪽.

93) 후계 경쟁 중이었던 김정일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 유부녀였던 성혜림과 극비리에 동거생활을 시작해야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성혜림, 『등나무집』, 368쪽.

94) 선군정치의 기원을 정식화하는 과정에서도 김정일이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영군체계를 확립하였고, 선군혁명위업계승의 기초를 축성하였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강희봉, 『선군정치문답』(평양: 평양출판

1960년대 후반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⁹⁵⁾ 정치위원제 실시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심 갈망하던 ‘군과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김정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김정일의 군 내 영향력 확대에 지렛대 역할을 한 대표 기관이 바로 총정치국이었다. 정치위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총정치국 예하 각급 정치부에 막강한 당적 권한을 부여 받은 정치위원과 정치지도원이 파견되었다. 군 내 정치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총정치국의 위상도 자연스레 신장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고,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진행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총정치국은 군대 내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정치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갔다.⁹⁶⁾ 김정일이 총정치국의 후견인으로, 총정치국은 김정일의 지원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추후 총정치국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⁹⁷⁾ 김정일은 총정치국의 과오를 지적하면서도 총정치국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해줌으로써 총정치국을 자신의 지원세력으로 묶어두었다.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후계체제에 대한 군대 내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사, 2008), 25~26쪽.

95)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194~196쪽.

96)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1.19),” 425쪽.

97)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34~35쪽 참조.

4. 결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북한 지도부의 군사적 자신감과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가장 극렬했던 1968년에 벌어진 1·21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호 나포,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는 분절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기별로 변화된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북한의 군사도발 사건들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찾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모험주의 전략 수행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군부강경파들이 숙청된 배경과 이유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당·군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정치위원제의 실시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건 해석적 설명에서 벗어나,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수정과 군부강경파 숙청의 구조적 연관성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첫째, 군벌관료주의자의 대표 격인 민족보위상 김창봉의 군령권 행사 여부에 대해 『김일성저작집』에 언급된 관련 내용들을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지휘계선에서 배제되었던 민족보위상은 전쟁 이후에도 군사교육과 후방 지원 등 ‘군정’ 관련 임무를 주로 수행해왔다. 인민군대에 대한 민족보위상의 군령권 행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민족보위성 예하 특수부대의 작전지휘와 관련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남공작이 특수부대의 주요 임무였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부대 운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과 수령이 제시한 군사노선과 전략적 방침을 벗어나는 월권적 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사회 전반에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강화되고 있었고, 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8년에 일어

난 1·21 청와대 기습,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등의 대남도발이 군부강경파의 일탈적 행위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1·21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나포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사건발생 이후 북한의 대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68년 1월 말~2월 동안 『로동신문』의 기사와 북한주재 외교공관들의 양 사건 관련 외교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1·21 청와대 기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활용되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북한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두 사건은 북한의 자주노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전략적 연계를 맺고 있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청와대 기습 이후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군사모험주의를 현상 유지시켰고, 북한의 대미·대소·대중협상력을 강화시켰다.

셋째, 1960년대 군사모험주의 전략이 주요 시기별로 변화해온 궤적을 『근로자』를 통해 추적하였다.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 전략은 준비단계, 고조 및 실행단계, 수정단계를 거치며 변화하였다. 남한 내 ‘혁명적당’ 조직 및 ‘반미구국통일전선’ 구축을 통한 혁명역량의 축적을 강조하던 분위기가 갑산파 숙청 이후 급변하였다. 최고지도부의 정세인식 변화와 군부강경파의 대남사업 요직 진출이 맞물리면서 1968년 들어 강경한 대남도발이 이어졌다. 1·21 청와대 기습 실패와 푸에블로호 사건을 겪은 후 대남도발의 효과성에 회의를 느낀 최고지도부는 군사모험주의 전략을 수정하였다. 준비단계에 제시되었던 혁명역량의 보존, 축적, 장성을 강조하는 지침이 재차 제시되었다. 김일성이 군부강경파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숙청을 감행한 데에는 수정된 전략적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주요했다.

넷째, 군사모험주의 전략 수행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군 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정치위원제가 실시되면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는 강화되었고, 군부의 자율성은 축소되었다. 각급 부대의 정치위원 및 정치지도원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어긋나는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군부강경파의 위세에 눌려있던 총정치국도 숙청 이후 좀 더 적극적인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위상이 강화되었다. 북한군 작전지휘체계에서 군 지휘관의 유일적 권한을 보장해주는 군사유일제가 약화되었고, 군에 대한 당적 통제는 제도화되었다. 한편, 정치위원제 실시로 김정일 후계 구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치위원제 실시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는 국면에 당에서 다져진 자신의 영향력을 군에도 투영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당·군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군사모험주의 전략의 수정과 군부강경파의 숙청을 통해 살펴보았다. 군부강경파가 독자적으로 군사모험주의 도발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김일성이 무력도발의 비난과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도 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북한은 김창봉, 허봉학 등 군부강경파를 ‘군벌관료주의자’로 매도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버렸다. 군부강경파가 주도한 대남도발 및 군사적 행동들은 ‘좌경맹동주의’로, 때론 ‘수정주의’로 비난받았다. 당과 수령의 기대에 ‘나름’의 충성으로 화답하려 한 군부강경파에게 이런 식의 비난이 과연 합당한가? 이들의 숙청은 결과적으로 조선인민군이 ‘당과 수령의 군대’로 확고히 거듭나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숨 막히는 후계경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던 김정일에게 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군부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당적 통제가 제도화됨에 따라, ‘당의 군대’로서 조선인민군의 성격은 공고

해졌고, 군대 내 유일사상체계 구축작업은 체계화, 가속화되었다. 군 부강경과는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 접수: 10월 14일 / 수정: 11월 10일 / 채택: 12월 10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강희봉, 『선군정치문답』(평양: 평양출판사, 2008).

김재욱, 『군사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내 로동당단체들의 제과업: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에게주는 참고자료』, RG242 SA2012, Item#11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2) 논문

김일성, “군사물자의 취급과 보관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조국해방전쟁의 전투경험을 연구하며 보급하는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발췌),” 『김일성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진지방어를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평양관개공사를 빨리 완공하자,”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현 국내정세와 1957년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데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김일성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정치부중대장의 임무,” 『김일성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3) 신문 및 잡지

『근로자』.

『로동신문』.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건사』, 제1집(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극동문제연구소, 『북괴군사전략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나루시계, 미치시타(道下德成), 『북한의벼랑 끝 외교사』, 이원경 옮김(파주: 한울, 2013).

대동편집부, 『통혁당-역사·성격·투쟁·문헌』(서울: 대동, 1989).

문순보, 『1968년과 2010년 북한 도발 환경의 비교와 현재적 함의』(성남: 세종연구
구소, 2012).

박병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유영구·정창현 엮음(서울: 선인,
2010).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3).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계승문제』(성남: 세종연구소,
2012).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5).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서울: 법
문사, 199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전략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2) 논문

고명균, “박헌영의 북한군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배경연구,”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2호(2014).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
주: 한울, 2006).

김보미,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 동맹의 특수사례”(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타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제9권 제1호(2006).

박시영, “1960-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연구: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백학순, “당·정·군 관계,”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과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7).

신종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대근,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과주: 한울, 2006).

한모니까, “4월민중항쟁시기 북한의 남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4·19와 남북관계』(서울: 민연, 2001).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3).

3) 신문 및 잡지

“통혁당 간부 구출 시도한 북간첩선 검거는 한국 중정의 역공작이었다,” 『월간조선』, 10월호(2010).

황일호, “극비·25년 만에 밝혀진 1·21 청와대 기습사건 전모,” 『월간중앙』, 2월호(1993).

_____, “극비·북한의 ‘제2의 6·25’ 작전,” 『월간중앙』, 4월호(1993).

_____,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의 진상,” 『월간중앙』, 7월호(1993).

3. 국외 자료

1) 논문

Szalontai, Balazs, “In the Shadow of Vietnam: A New Look at North Korea’s Militant Strategy, 1962-1970,”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4:4(Fall 2012).

Schaefer, Bernd,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

1972,” CWIH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Series #44.

Radchenko, Sergey S.,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orking Paper Series #47.

2) 기타 자료

“A Conversation with the 1st Secretary of the Embassy of the USSR in the DPRK, Comrade Zvetkov, and Comrade Jarck”(July 29,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98>(검색일: 2015.5.30).

“Conversation Between Kim Il Sung and Lee Hu-Rak”(May 04, 1972), Inter- Korean Dialogue 1971~1972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780>.

“Memorandum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DPRK for the Ambassadors and Acting Ambassadors of all socialist Countries accredited to the DPRK”(January 24,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41>(검색일: 2015.5.21).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DPRK”(June 4,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698>(검색일: 2015.5.30).

“On Current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PRC”(March 03, 1968), China-North Korea Relations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655>(검색일: 2015.5.30).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20, Flash”(January 26,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46>(검색일: 2015.5.22).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44, Regular”

(February 16,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57>.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76.068, Urgent”(March 17, 1968),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Collection of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67>(검색일: 2015.6.1).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in the late 1960s and the Changes of Party-Military Relations

Koh, Myeong Gyun(Yeaju Daeshin Middle School)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s of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strategy in the late 1960s had an effect on the party-military relations. Military adventurism was an expression of its obsession with unification by force and a strategic choice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The Blue House raid, the seizure of the USS Pueblo, the infiltration of armed guerrilla in Uljin-Samcheok were resulted from the changes of military adventurism strategy. Military adventurism strategy was greatly modified in the mid 1968. Military hardliners who had played a key role in prosecuting its military adventurism strategy failed to perform their modified duties. Kim Il-Sung denounced the military hardliners as ‘warlord-bureaucrats’ and removed them from the scene of history. After the purge of military hardliners, party-military relations had changed. Commissar system was instituted to give the party control

over the military which sets a limit on the autonomy of the military. As a result of commissar system, the autonomy of the military was weakened and Kim Jong-Il had advantage in the power succession race.

Keywords: military adventurism,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military hardliners, purge, commissar system